

■ 박근종 칼럼

## 일하는 노인 늘고 고독사 급증, ‘낀 세대’의 그늘 서둘러 걷어내야



한국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늦은 나 이까지 가장 많은 노인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는 이면에는 ‘노동의 보람’보다 ‘생계를 위한 선택’이 자리하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현실과 연금 수령 기간까지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계가 이 틈을 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정 정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청년 고용과 노동생산성, 기업 부담 증가, 세대·노사갈등 등이 얹혀 있어 쉽게 해결할 문제가 결단코 아니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 이슈를 방치(放置)하고 방관(傍觀)하며 방기(放棄)할 수만은 없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루면 미룰수록 실타래만 꼬일 뿐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게 우선이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지난 12월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하며 한국도 국제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전날인 12월 23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 중 65세 이상이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에서 20.0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는 유엔(UN)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당초 2025년으로 예상했지만,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1956년에 제정된 국제연합(UN)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살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간주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뒤, 2017년 고령 비율이 14.02%로 두 배 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고령사회에서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OECD 국가 중 도달 속도가 가장 빠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3%에 달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에 달했다. 해당 조사에서 근로 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일하는 즐거움’ 36.1%, ‘무료함 달래기’ 4.0%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생계 중심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했다.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노후에는 추가 소득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족이나 연금 첫 수령 나이도 1961

~1964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늦춰진다. ‘더 내고 덜 받는다’는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지면 연금 고갈 시기도 앞당겨질 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퇴직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법정 정년(60세) 이전에 일자리를 관둔 나이가 올해 기준 52.9세였다.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희망 연령인 73.4세와는 괴리가 크다.

국민연금 역시 구조개혁이 아닌 보수 개혁만으로는 여전히 갈 길이 요원하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 노동계가 이 틈을 타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법정 정년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청년 고용과 노동생산성, 기업 부담 증가, 세대·노사갈등 등이 얹혀 있어 쉽게 해결할 문제가 결단코 아니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 이슈를 방치(放置)하고 방관(傍觀)하며 방기(放棄)할 수만은 없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40%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루면 미룰수록 실타래만 꼬일 뿐이다. ‘정년 연장’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맞다.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통해 숙련 인력 이탈을 막는 게 우선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1월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정년이 늘수록 임금 부담이 커지는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 구조를 고치는 구조개혁을 주문한 것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IMF는 고령층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으로 법적 ‘정년 연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공서열 방식 임금 체계를 개혁한다’고 고령층이 법적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과 야대 노총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섰지만, 연공 서열 방식 대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는 20대 이하 청년층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IMF는 “인구 구조 변화로 연금, 보건의료, 장기 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 비율이 89.3~129.3%에 달해 재정 여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중세나 연금 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서는 경우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99%로 낮아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수출 측면에서 첨단 제조업 분야에 높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 국가·품목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인공지능(AI) 도입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되 서비스 수출 확대, 역대 교역 강화 등 수출 기반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그냥 허투루 들어넘길 일이 결단코 아니다. 연공서열 임금 체계는 반드시 개혁해야만 하는 당위를 각별 유념해야만 한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2021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고독사 위험자 지

원 의무를 부여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고독사 발생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7일 보건복지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3,661명에 비해 263명(7.2%) 늘었다. 2020년 3,279명에서 5년 사이 매해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인구 10만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도 2023년 7.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0.5명 늘어났다.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성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50, 60대 남성 비중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단절된 주거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50, 60대 남성들 가운데는 조기 퇴직이나 사업 실패, 이혼과 사별로 뜻하지 않게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혼주의자 등 스스로 1인 가구를 선택한 이들은 외부 활동과 교류에 적극적이지만 실직과 사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는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함에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 때문에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이웃 간 유대가 약한 곳에서 사는 경우가 많아 ‘고독사’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무엇보다 50, 60대 남성 ‘고독사’의 특징 중 하나는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다. 20대 이하의 ‘고독사’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중은 57%인데 50, 60대 남성은 83~13.5%에 불과하고 대개 질병으로 사망한다. 50, 60대는 신체 기능 저하에다 고혈압, 당뇨,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위험이 커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쫓겨나는 사람이 없어 병을 키우고, 응급상황이 생겨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골든 타임(Golden-time)’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장년 세대는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노년층과 달리 정책의 대상도, 복지 대상도 아닌 소외된 세대다.

특히 이 연령대의 한국 남성들은 직장 생활의 거의 전부인 세대여서 ‘명함 없이 사는 삶’이 타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좌절하기 쉬우나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도움을 받는 일에는 서툴고 어쭙했다. 경제적·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노년기로 영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돕고 정부도 맞춤형 정책으로 적극 도와야 한다. 술과 담배가 아닌 사람과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쓸쓸한 노후와 고독한 죽음을 막는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고독사 주요 원인인 사회적 고립에도 선제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서둘러 ‘고독사’를 막아야 한다.

한편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을 지닌 20, 30세대 가운데 장기 실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고용시장의

한파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1월 16일 기준으로 구직 활동을 6개월 이상 했는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20, 30대 고학력자는 3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3만 6,000명) 이후 최대치다. 고학력 청년 백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장기 실업자도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장기 실업자와 더불어 구직을 포기한 20, 30대 ‘그냥 쉬었음’ 인구도 가파르게 늘어 더 걱정이 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11월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취업자 수는 2,90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84만 7,000명보다 소폭(19만 3,000명 | 0.7%) 늘었으나 60세 이상의 고령 취업이 주도했다. 30대 ‘그냥 쉬었음’ 인구는 33만 명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그냥 쉬었음’ 인구도 40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 증가, 역대 최고를 찍었다. ‘그냥 쉬었음’ 인구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을 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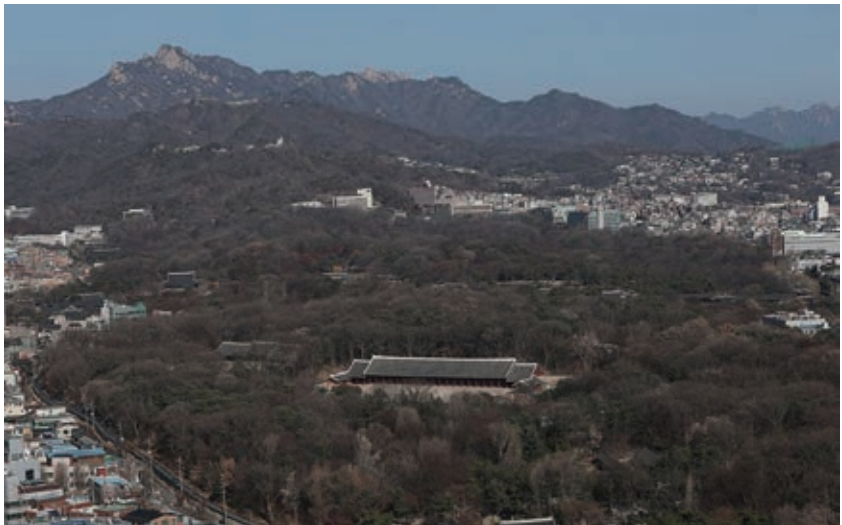
최상의 해법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따미침 지난 11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은 향후 5년간 총 8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에서 17만 명 이상의 직접 고용을 창출할 것인바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R&D) 투자를 포함해 국내에 총 450조 원을 투입하고 6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팹텍 캠퍼스 2곳씩 5대인 건설과 비수도권 AI 컴퓨팅센터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SK그룹은 오는 2028년까지 128조 원 국내 투자를 추진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600조 원 규모의 선제 투자를 계획 중이다. 매년 1만 4,000명에서 2만 명의 고용효과를 목표로 하며, 8,600억 원 규모의 ‘트리니티 팹’을 구축해 소부장 및 반도체, 화학계의 개방형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도 추진했다. 현대차는 5년간 연간 25조 원씩, 총 125조 원의 국내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며 매년 최대 2만 명의 고용효과를 내다냈다. LG 그룹은 향후 5년간 국내에 100조 원을 투자하며, 이 중 60%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입해 공급망 자립과 AI 도입을 가속화(加速化)한다. HD현대는 향후 5년간 국내에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8조 원은 에너지 및 AI 기반 기계·로봇 분야에, 7조 원은 조선·해양 산업에 투입한다. 한화그룹은 향후 5년간 조선·방산 분야에 11조 원을 투자한다. 옥포조선소 확장과 첨단 합성 및 무기체계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방산 공급망 강화와 기자재 국산화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까 우려하지 말라”며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 실업 해소와 노년 고용의 ‘정책 조합’이 절실하다.

작가·칼럼니스트(현,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 전, 서울특별시자치구공단이사장협의회 회장·전, 소방준감)

## 세계유산 주변 도시 개발 사업·도로 공사, 영향평가 받아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앞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은 사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묘(宗廟) 앞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이달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계유산법의 후속 조치다.

현행법에 따라 세계유산의 기준이 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대상 사업,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가유산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국가가 건설하는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건설 사업 등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 계획을 확정하기 전 사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종사업체,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세계유산 구역과 떨어진 이격 거리도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도 담겼다.

사업 시행자 등은 세계유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의 규모와 범위, 세계유산의 경관·환경·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 등을 살펴 봐야 한다. 이 밖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 영향평가서 검토 및 보완·조정 절차,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가유산청은 내년 1월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께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이라도 문화유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제정도 준비 중이다.

## 〈나전장의 도안실〉 해외 순회전 성료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은 한국의 우수한 전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해외 한국문화원에 소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에 선정되어 박물관 개관 이래 최초로 해외 순회전 전시를 개최하였다. 주미국 LA한국문화원(25.8.21.~10.10.)을 시작으로, 주캐나다 한국문화원(25.10.23.~12.12.)으로 순회하며 교민은 물론 현지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종료했다. 〈나전장의 도안실〉은 2023년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기획전으로 나전칠공예의 설계도인 ‘나전 도안’을 조명하고, 한국 근현대 대표 나전장 6인의 회귀 도안과 작품을 최초로 발굴·공개한 기획전이다. 해당 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투어링 케이-아츠’ 사업에 선

정되어, 천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우리 나전칠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에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작품의 설계도이자 창작의 출발점인 ‘도안(圖案)’과 함께 나전칠기 작품을 선보이며 완성된 공예품 이면에 담긴 장인정신과 섬세한 기교, 예술적 감수성을 조명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순회전의 성공에는 연계 프로그램의 역할도 컸다. LA한국문화원에서는 개막을 기념하여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의 특별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 강연은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나전칠공예의 역사와 전통을 국제적 맥락에서 심도 있게 다뤄, LA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및 교민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 제2회 서울조각상 공모전 대상작 선정…시민·전문가가 뽑은 최고작은?

제2회 서울조각상 입선작 중 전문가 평가 및 시민 투표 합산해 최종 대상작 선정

서울시는 제2회 서울조각상 공모 입선작 중 전문가 평가 및 시민투표를 통하여 대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투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최종 선정된 대상작은 서울특별시시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 9월 독서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서울조각페스티벌’에서 제2회 서울조각상 입선작이 11월까지 전시됐다.

시는 입선작 중 전문가 평가(50%)와 현장 QR 코드를 통해 참여한 시민투표(50%)를 반영하여 최고점을 받은 작품

을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방인균 작가의 〈얼추!〉이며, 상모놀이 중 ‘나 비장’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야외 조각에 맞는 소재의 적합성과 조형성, 안정성, 대중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방색을 두르고 하얀 깃을 휘날리며 가락과 장단에 맞춰 나비처럼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을 표현한 해당 작품은 농악이라는 공동체적 전통문화가 지닌 안정, 화합, 단결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풀어냈다.

대상작 및 서울조각상 입선작들의 사진 및 설명 등은 조각도시 서울(<https://artinseoul.kr/seoulsculpturefestival/>) 홈페이지에서 도상체화 확인할 수 있다.

방인균 작가는 작품을 마주하는 시민들이 마음속 향수와 공동체의 기억, 작은 희망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았다.

전통의 리듬감과 동심의 에너지를 조형적으로 풀어낸 이 작품이 일상 속에서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처럼 따뜻한 흔적으로 남기를 기대한다는 소

감을 전했다.

대상작은 노을공원에서 3년간 전시되며,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제2회 서울조각상 공모 주체였던 ‘생동의 서울 : 나비의 날갯짓’이라는 메시지와 예술적 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번 제2회 서울조각상 대상작이 시민들에게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조각가들의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b>세계타임즈</b>	www.thesegeye.com 7차제보: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귀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 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